

#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 30년 지연 가뭄피해 극심

### 신안·무안·함평·영광 1만6700ha 논·밭 물 공급 공사 예산 지급 안돼 3차례 완공시점 변경 ...지역민들만 피해

전남 서남부 해안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한 영산강 4단계 농업개발사업이 정부의 한심한 예산 지원으로 인해 30년 이상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신안·무안·함평·영광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반복되면서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전남도에 따르면 영산강 4단계 사업은 무안·신안·함평·영광 등 4개 지역 1만6700여

ha의 논과 밭에 급수관으로 영산강 물을 공급하는 공사다. 농어촌공사가 2001년부터 8489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용수관로 487km, 양수장 10개소, 조절지 7개소, 배수장 13개소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2001년 착공한 이 사업은 당초 2008년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제 때 지급되지 못하면서 2010년, 2015년, 2020년 등 3차례에 걸쳐 완공 시점이 변경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비 270억원을 포함해 17년 동안 투입 예산은 3834억원으로, 현재까지 사업진척도가 43%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3년간 1500억원 이상이 배정돼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영산강사업단과 전남도의 전망이다. 현재 정부의 예산 규모로 볼 때 사업 완공은 2041년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완공시점에서 무려 33년이 지체된 것이다. 영산강 4단계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가뭄으로 이

들 4개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반복되면서 가뭄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이들 4개 시·군에서는 5073ha, 밭 4884ha가 가뭄피해를 입어 25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무안과 신안을 중심으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년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들이다보니 정작 시급한 곳에 정부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인구절벽 극복 다양한 플랫폼 구축을”

### 민형정 광주전남연구위원

전남의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시민사회, 여성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위원 민형정 책임연구위원은 9일 열린 ‘인구감소 대응 전남 발전 방안 워크숍’에 앞서 8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전남 인구정책 플랫폼 구성안을 제시했다. 민 연구위원은 도·시·군과 각 의회, 전남 여성프라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자치단체 공모와 지원을 통해 돌봄 플랫폼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별 인구정책 거점공간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파트형’, ‘주민자치센터형’, ‘작은 도서관형’, ‘협동조합형’ 등 거주 형태, 지역 사회 단위별 인구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그는 제안했다. 전남도는 이런 인식을 반영해 인구정책 민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의 가임여성 인구비율은 2014년 39.0%, 2015년 38.9%, 지난해 38.7%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광주(53.7%→52.9%→52.1%)는 물론 전국 평균(50.5%→49.8%→49.1%)에 크게 못 미친다. 광주전남연구위원과 전남도는 9일 오후 2시 광주전남연구위원 상생마루에서 인구감소 대응 전남 발전방안 워크숍을 연다. /윤현석기자chadol@

# 코미 ‘폭탄 증언’에 트럼프 최대위기...탄핵문 열리나

### ‘러 스캔들’ 수사중단 요구 전문가 탄핵 사유 사법방해 트럼프·백악관 강력부인 속 여당서도 탄핵론 공감 일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만에 최대위기에 봉착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중단 압력을 공식으로 폭로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9일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미 언론은 코미 해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충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미리 공개한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떼달라’(let go)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수사의 구름을 걷어내려면 뭘 할 수 있느냐’는 물음도 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나는 충성심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코미 메모’의 핵심 의혹들이 코미 전 국장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확인된 셈이다. 코미 전 국장의 발언이 예전 그대로 전부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 사유인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대부분 헌법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법 방해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직면했던 중대 범죄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



코미 전 국장.

결국 사임한 리처드 닉슨 및 르윈스키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중단 요구가 사법 방해에 따른 정상적인 범죄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백악관도 수사중단 요구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 간의 진실공방과 더불어 여야 정치권의 지루한 갑론을박이 예상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4일 성인 52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보호를 위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던 코미 전 국장을 전격으로 해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정치권에선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이미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탄핵론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공화당의 저스틴 아메쉬(미시간) 하원의원은 최근 만약 수사중단 요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코미 전 국장의 이번 증언을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의회 흑인 의원 모임인 ‘블랙 코커스’(CBC) 소속 알 그린(텍사스) 하원의원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연합뉴스

##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탄력 받아

### 권욱 도의회 부의장 조례 발의

권욱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8일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계획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 과제로 설립 준비 중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조례로 광주시의회도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출자·출연기관 승인을 받았다. 호남은 설화, 전설, 민담, 판소리 등의 자료가 산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전남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권 부의장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호남학 연구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 등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사업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시 청년정책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김동찬(민·북구 5) 의원은 광주시 청년정책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인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 고용촉진·생활안정 지원대책과 청년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부채 감소, 이자상환 지원, 주거 마련, 일자리 대책의 예산 지원 근거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했다. 미취업 청년에게 교통비·건강검진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 안정과 부채 경감에 필요한 비용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법인·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령 상향

전남도가 6월부터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미만까지 상향하고, 3ha 미만으로 제한한 경지 면적을 폐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여성 가운데 가구당 경지면적이 3ha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업·임업·어업 경영 가구원이 대상이었다. 사업 지원을 바라는 여성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년 행복카드를 통해 1인당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0만원을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도서관, 스포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